



제3편 정치·행정

제1장 정치 政治

제1절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

1. 초대 대통령과 제 1, 2대 부통령 선거

일제의 잔학무도한 통치에서 조국은 비극의 연속이 끝나지 않았다. 미(美)·소(蘇) 양국의 군정(軍政)으로 38선이 그어지고 민족분단의 아픔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그로부터 3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북(南北)통일의 정부를 수립하고자 노력했으나, 통일정부 수립은 달성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갈망에 따라 1948년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그래서 같은 해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를 통하여 1948년 5월 31일 역사적인 제헌국회(制憲國會)가 수립, 개회되고 초대 의장에 이승만(대한독립촉성국민회), 부의장에 신익희(申翼熙)(대한독립촉성국민회), 김동원(金東元)(한국민주당)을 각각 선출하여 의회(議會)구성을 마쳤다.

1948년 6월 10일 국회법이 채택, 공포하기에 이르렀으며 헌법심의에 착수, 7월 17일에 역사적인 대한민국 헌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고 바로 공포되어 신헌법(新憲法)에 의하여 정부조직법이 제정되었다.

7월 29일 국회(國會)는 위의 정부조직법에 따라 초대 대통령과 부통령의 간접 선거를 실시하였고 이 선거에서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李始榮)이 각각 당선되었다.

【초대 대통령 후보자 득표 상황】

성명	득표수	비고
이승만	180	독립총성회(당선)
김구	13	한독당
안재홍	2	국민당
서재필	1	외국 국적자로 무효
계	196	

【초대 부통령 후보자 득표 상황】

성명	득표수	비고	성명	득표수	비고
이시영	113	당선	장택상	3	
김구	65		서상일	1	
조만식	10				
오주창	5		계	197	

2차 투표에서 이시영(李始榮)이 133표로 당선, 그러나 초대 부통령 이시영의 사임으로 1951년 5월 16일 제2차 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성명	득표수	비고	성명	득표수	비고
김성수	66	당선	지청천	2	
이갑성	53		김창숙	1	
함태영	17				
장택상	11		계	197	

1차 투표에서 미달되어 다점(多點)순위 2명을 끌어 결선투표를 하게 되었다. 김성수(金性洙), 이갑성(李甲成)양인에 대한 결선투표를 한 끝에 재석의원 152명 중 김성수 75표, 이갑성 73표, 기권 1표로 김성수가 제2대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2. 제2대 대통령과 제3대 부통령 선거

1951년 2월 29일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였다.

1년이 지난 1952년 1월 18일에 동 개헌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출석의원 153명 중 가표 19표, 부표 143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다.

정부는 동년 5월 14일에 내용을 약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였으나 전남북 일대의 계엄선포와 국회의원 50명이 헌병대에 연행된 사건 등 여·야 의원들의 불화로 국회를 개원하지 못하고 동년 6월 12일에야 정·부통령 직접선거제와 양원제를 채택, 국무총리, 국무위원 제청권과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임권 등 4개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제3의 개헌안이 제출되었다.

동 개헌안은 동년 7월 4일밤 9시에 재적의원 183명 중 166명이 출석하여 기립표결을 한 결과 기권 3표, 찬성 163표로 통과시켰다.

따라서 정부는 7월 7일에 제1차 개정헌법을 공포하였고, 개정헌법에 따라서 1952년 8월 5일을 선거일로 결정·공포하였다. 동 대통령 선거에는 자유당(自由黨)의 이승만(李承晩), 무소속 이시영(李始榮), 무소속 조봉암(曹奉岩), 무소속 신흥우(新興雨) 등 4명이 출마하였으나 7,020,684표의 74.6%에 해당하는 5,238,769표를 얻은 이승만이 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한편 같은날 실시된 부통령 선거에서는 자유당의 이범석(李範奭), 무소속 이갑성(李甲成), 자유국민당 조병옥(趙炳玉), 조선민주당 이윤영(李允榮), 여자국민당 임영신(任永信), 대한노동연맹 전진한(錢鎭漢), 무소속 함태영(咸台榮), 무소속 백성욱(白性郁), 무소속 정기운(鄭基云) 등 9명이 난립하였으나 함태영(咸台榮)이 유효투표 41.3%인 2,943,813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3. 제3대 대통령과 제4대 부통령 선거

1954년 9월 6일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종신 연임제와 일부 선거조항에 따른 국민투표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이 개정안은 동년 11월 27일 표결에 부쳐진 결과 가(可) 133표, 부(否) 60표, 기권 7표로서 가결되었다.

이 표결 결과가 일단 부결이 선언되었으나 자유당은 4사(捨)5입(入)이라는 헌정사상 또 하나의 먹칠을 하고 가결을 선언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이 종신토록 집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헌법에 의하여 실시된 제3대와 제4대 부통령 선거 결과 자유당의 이승만이 유효표의 70%인 5,046,437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민주당의 장면(張勉)이 유효표의 46.4%인 4,012,654표를 얻어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4사5입 개헌안의 통과, 자유당의 장기집권 또한 권력을 배경으로 한 부정부패, 폭력의 난무, 각종 선거의 부정은 민주당의 구호인 ‘못 살겠다 갈아보자’에 공감하였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신익희(申翼熙)의 인기는 상승했으나 호남유세를 마치고 상경하다가 강경(江景)~익산(益山)사이에서 사망하였다.

4. 제4대 대통령과 제5대 부통령 선거

자유당의 대통령 이승만과 부통령 후보 이기붕(李起鵬)은 1960년 3월 15일에 실시한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유효표의 88.7%인 9,633,376표로 당선되었고, 제5대 부통령에 이기붕이 유효표의 79%인 8,337,059표를 얻어 당선되었으나 정당하게 얻은 당선이 아니라, 국민들은 선거결과를 믿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의거의 함성이 높아갔고 드디어 4·19 학생의거의 발발로 인하여 정·부통령선거는 무효화되었고 이승만 대통령도 하야하게 되었다.

5. 4·19 혁명과 제4대 대통령 선거

4·19혁명으로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고, 1960년 6월 15일 제3차 헌법개정에 의하여 대통령 권력구조는 내각책임제로 변경되어 대통령의 지위와 선거 방법도 달라졌다. 허정 과도정부의 주도하에 개정된 헌법에 따라 1960년 7월 29일 5대 국회의원 선거와 초대 참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1960년 8월 12일 참의원과 민의원 양원합동회의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민의원 의원정수 233명과 참의원 의원정수 58명 가운데 선거 결과가 종결되지 않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민의원 220명과 참의원 43명 등 263명의 재적의원 중 259명이 참석하였다.

민주당의 신파와 구파는 각기 국무총리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에서 윤보선을 지지하여 1차 투표에서 208표를 얻은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제4대 대통령 후보자별 득표 상황을 보면 표와 같다.

한편, 국무총리 선출에서는 윤보선에 의해 지명된 구파의 김도연에 대한 표결이 가 111표, 부 112표, 기권 1표로 부결되고, 대신 신파인 장면에 대한 표결은 가 117표, 부 107표, 무효 1표로 동의를 얻어 장면 내각의 출범을 보게 되었다.

【 제4대 대통령 선거 결과 】

후보	윤보선	백낙청	김도연	김병로	김창숙	변영태	허정
득표수	208	3	2	1	29	3	2
후보	김시현	나용균	유옥우	박순천	이철승	무효	계
득표수	1	1	1	1	1	6	259

6. 5·16 군사정변과 제5대 대통령 선거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에 의하여 장면(張勉)내각은 무너졌다. 군사혁명위원회는 5월 19일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발족하고 국가정권을 맡게 되었다. 국가재건최고위원회는 1962년 3월 16일 정변 전후를 통하여 특정지위에 있었던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최장 1968년 8월 15일까지 금지하는 정치활동정화법(政治活動淨化法)을 제정 공포했다. 이 법 제정으로 인해 4,363명이 정치활동 금지를 당하게 되었다.

1962년 11월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單院制)를 주요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이 최고회의 의결로 발의되어 동년 12월 26일 정식으로 공포되었다. 1963년 1월 16일에는 국회의원 선거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동년 2월 1일에는 대통령 선거법이 제정·공포되었는데 국회의원 선거구는 과거의 233개구로 선거지역을 확장하였으며, 전국 선거구에서 정당에다 던진 표에 의해서 비례대표로 뽑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1963년 10월 15일 실시한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박정희는 유효표의 46.6%인 4,702,640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7. 제6대 대통령 선거

정부는 대통령 선거일을 1967년 5월 3일로 결정했다. 2월 2일 민주공화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박정희 총재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으며 2월 5일 모든 야당은 야당통합 4자 회담을 통해 윤보선씨를 대통령후보로 지명했다. 대통령 후보의 등록 마감일까지 확정된 입후보자는 모두 7명이었다.

여야의 선거대결에서 전북은 총유권자 1,126,093명 중 987,042명이 투표하여 87.7%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공화당의 박정희 후보가 392,037표를 얻었고 윤보선후보가 451,611표를 획득하여 윤(尹)후보가 박(朴)후보보다 59,574표를 더 얻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박정희 후보가 윤보선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 이 선거에서 장수군은 총선거인수 35,000명 중 33,067 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장수군의 후보자별 득표수는 다음과 같다.

후보자	박정희(朴正熙)	윤보선(尹潽善)	이세진(李世鎭)	전진한(錢鎭漢)	김준연(金俊淵)	오재영(吳在泳)
득표수	10,771	17,412	247	1,241	787	671

8. 제7대 대통령 선거

1969년 10월 17일 국민투표에 의해서 헌법이 개정되었다.

첫째, 국회의원 수는 150명 이상 200명 이하의 범위 내에서 뽑는 것을 법률로 정하였던 것을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범위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개정했다.

둘째, 국회의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의회의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사직을 겸할 수 있다.

셋째, 헌법 제6조 2항 단서상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50명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넷째, ‘대통령은 1차에 한해서만 중임할 수 있다’를 ‘대통령 계속 재임은 3기에 한 한다’고 개정 었다. 이 헌법에 의하여 제7대 대통령선거는 1971년 4월 27일 실시하였으며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가 유효표 11,923,218표 중 6,342,828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9. 제8대 대통령 선거

1972년 10월 17일 하오 7시에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령과 동시에 특별 선언을 발표하였다. 특별 선언문 내용은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과 정치활동 금지, 헌법의 일부 조항을 정지시켰다.

헌법 일부가 정지된 기능은 국무회의에서 권한을 대행하며 비상 국무회의의 기능은 현행 국무회의에서 수행하고 비상국무회의는 동년 동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확정하며 확정된 개정헌법에 의한 기능을 1972년 연말 안에 실시한다는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국회를 해산하였다.

따라서 12월 15일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2,359명이 선출되었고 동월 22일 박정희 후보는 통일주체국민회의 사무처에 곽상훈(郭尙勳) 외 514

명의 추천을 받아 제8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였다.

동월 23일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 통일주체대의원 첫 집회에서 박정희 후보는 대의원 2,359명 중 2표의 무효표를 제외한 2,357표로 당선되었다. 따라서 12월 27일에 6년 임기의 제8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10. 제9대 대통령 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인 박정희 대통령은 1978년 7월 1일 제9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통일주체국민회의 제1차 회의를 7월 6일 오전 10시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곽상훈(郭尙勳) 대의원은 7월 5일 대의원 507명의 추천을 받아 박정희 대통령을 제9대 대통령 후보로 통일주체국민회의 사무처에 등록했다.

후보자 등록 마감시한인 7월 5일 오후 5시까지 다른 후보자의 등록이 없어 박정희 후보는 단일 입후보하였다. 곽상훈(郭尙勳) 대의원은 박정희 후보를 추천함에 있어, “박대통령은 1, 2,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국민생활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오게 했으며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치를 크게 신장시켰고 선진국대열에 비약하는 고도산업국가 건설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7월 6일 시행한 대통령 선거는 재적 대의원 2,581명 중 2,578명이 투표에 참가 했으며 개표 결과 박정희 후보가 2,577표를 얻어 (무효 1표) 제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박정희(朴正熙)대통령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고도산업국가와 복지사회를 건설하고 민족문화의 찬란한 꽃을 피우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박차를 가할 80년대를 내다볼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당선소감을 피력했다.

11. 제10대 대통령 선거

최규하(崔圭夏)大統領 권한 대행은 1979년 12월 1일 대통령보궐선거(大統領補選)를 위한 통일주체국민회의 제3차 집회 일을 12월 6일로 공고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곽상훈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827명의 대의원은 12월 3일 대통령후보로 최규하 대통령 권한 대행을 추천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 사무처에 등록했다. 곽상훈 운영위원장은 후보 추천문에서 ‘최규하대통령 권한대행을 추천기로 뜻을 모은 것은 안정 속에서 오늘의 국가비상시국을

타개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2월 6일 재적대의원 2,560명 중 2,549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보궐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여 단독후보로 등록된 최규하 대통령 권한 대행에 찬성 2,465표, 무효 84표의 압도적 절대다수표로 지지하여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 사무처는 이날 당선을 공고했다.

문화공보부는 12월 6일 '제10대 대통령(大統領)으로 선출된 최규하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 선포일인 12월 6일부터 개시된다' 고 발표했다.

12. 제11대 대통령 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80년 8월 2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 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재적 대의원 2,535명 중 2,525명이 출석한 가운데 개최된 회의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 권한 대행인 박충훈(朴忠勳) 대통령 권한 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선거의 의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크고 이는 새 국가지도자를 중심으로 지금 진행 중인 사회개혁을 포함한 제반 구국(救國)과업을 중단 없이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정부가 대내외에 공약한 정치일정을 더욱 앞당겨 실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법치국가로서 민주주의의 저력을 가진 문명국가임과 평화적인 정권이양(政權移讓)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선거' 임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개회식에 이어 헌법(憲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선거를 무기명 비밀 투표한 결과 2,524표(무효 1표)를 얻은 전두환(全斗煥)후보를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전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 선포일인 8월 27일부터 시작됐다. 전두환 대통령은 9월 1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각계 대표 9,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13. 제12대 대통령 선거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하여 전두환(全斗煥)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의 선출일을 1981년 2월 11일로 대통령 선거일을 2월 25일로 공고했다.

선거인 선거일 공고에 따라 1981년 1월 29일까지 대통령 선거인 등록접

수를 실시하였는데 전국 1,509개 선거구에서 9,479명이 등록하여 선거인 정수 5,278명에 대해 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78.1%의 투표율을 보였던 2월 11일 총선에서 민정당이 3,679명(69.6%), 민한당이 411명(7.8%), 국민당이 48명(0.9%), 민권당이 20명(0.4%)의 선거인을 확보했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인사 중에 1,123명(21.3%)이 선거인으로 당선되었다.

이로써 대통령에 입후보하였던 전두환(全斗煥)후보는 민정당이 추천하여 당선시킨 선거인만으로도 당선이 가능하게 되었다.

헌정사상 최초로 실시된 선거인에 의한 간선제 선거에서 전두환후보가 전체 유효표의 90.2%인 4,755표를 획득하여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4. 제13대 대통령 선거

새 헌법 공포 이전부터 불붙기 시작한 제13대 대통령 선거전은 선거일이 1987년 12월 16일 확정되자 더욱 가열되어 곳곳에서 유혈 충돌사태가 빚어졌다. 처음부터 지역대결의 양상을 나타낸 선거전은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하면서부터 지역감정, 상대방에 대한 폭력과 유세방해 등 충돌로 치달았다. 선거전의 혼탁과 과열, 극한대립, 폭력사태에도 불구하고 12월 16일 제13대 대통령선거는 전국에서 동시 실시되었다.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총 유권자 25,873,624명 가운데 23,059,833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89.1%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 같은 높은 투표율은 17년 만에 치르는 대통령 직접선거에 대한국민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70% 안팎의 낮은 투표율을 보여 왔던 서울도 지방과 차이가 없는 88.2%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이 특기할 만하다.

비교적 큰 말썽 없이 진행된 개표결과 민정당의 노태우(盧泰愚)후보가 투표율의 36.6%인 8,282,738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되고 차점자인 민주당의 김영삼(金泳三)후보가 6,337,000여 표(28%) 3위인 평민당의 김대중(金大中)후보 6,113,000여 표(27%)를 얻어 약 2,000여 표로 낙선되었다.

장수군(長水郡)의 경우 선거인수 27,341명 중 24,709명이 투표했다. 노태우 4,520표, 김영삼 362표, 김대중 18,578표, 김종필 100표 등의 득표수를 보였다.

15. 제14대 대통령 선거

제3공화국에서 제6공화국까지 막강한 힘을 가진 군인 출신들에 의한 대

통령 선거는 종막을 내리고 명실상부하게 민간인들에 의한 선거라고 자부할 수 있는 문민정부구성을 위한 대통령 입후보자들은 순수한 민간 정치가들이었다. 그러나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일부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입후보자를 제외한 지명도 높은 입후보자들은 지역연고를 바탕으로 한 선거전에 돌입했다. 입후보자 본인들의 의지에 상관없이 선거전은 지역감정을 부추기면서 과열되기 시작했다. 민주자유당의 김영삼후보는 경상도에서, 민주당의 김대중후보는 전라도에서, 통일국민당의 정주영후보는 강원도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지역감정에 의한 선거전처럼 전개되었다. 그러나 과열된 선거전에 비하면 큰 불상사 없이 선거는 치러졌다.

1992년 12월 18일에 실시된 선거에서 우리나라 총 유권자 29,422,658명 중 81.9%인 24,095,170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투표자 중 33.9%인 9,997,322명이 민주자유당의 김영삼후보에게 표를 던져 당선되게 하였다. 제1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영삼후보는 영남에서 많은 표를 얻었고, 차점으로 낙선한 김대중후보는 호남과 서울에서 절대적인 지지표를 얻었으나 고배를 마셨다.

본 군에서는 총 유권자 23,312명 중 83.8%인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보여 19,538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김영삼후보에게 6.7%가 지지한 반면 김대중후보에게는 71.1%의 지지율을 나타내어 여기에서도 지역감정이 여실히 나타났다.

【제14대 대통령 선거 내용】

정 당	입 후 보 자	전 국 득 표	본 군 득 표	비고
민주자유당	김영삼	9,977,332	1,579	당선
민주당	김대중	8,041,284	16,582	
통일국민당	정주영	3,880,067	531	
신정당	박찬종	1,516,047	146	
대한정의당	이병호	35,739	35	
무소속	김옥선	86,292	251	
무소속	백기완	238,648	84	

16. 제15대 대통령 선거

1997년 12월 18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7명의 후보자가 등록되었다. 야당측은 자민련의 김종필 후보가 사퇴하면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후보자 단일야당의 후보가 되어 분열조짐을 드러낸 여당권의 신한국당과 국민

신당보다 유리한 입지를 점유할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여야 정권교체의 첫 대권자로 성공했다.

특히 김대중후보는 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세의 전폭적인 지지율을 얻고 당선권을 예감했던 투표였다.

정 당	입후보자	전국투표	본군투표	비 고
한나라당	이회창	9,935,718	818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10,326,275	16,730	당 선
국민신당	이인제	4,925,591	517	
국민승리21	권영길	306,026	54	
공화당	허경영	39,055	30	
바른나라정치연합	김한식	48,717	168	
통일한국당	신정일	61,056	63	

17. 제16 대 대통령 선거

제16대 대통령 선거에는 총유권자 3,499만 1,529명 중 2,478만 4,963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70.8%의 투표율을 보였다.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후보는 1,201만 4,277 표, 한나라당의 이회창후보는 1,144 만 3,279표, 하나로연합회 이한동후보는 7 만 4,027 표, 민노당의 권영길후보는 95 만 7,148 표, 사회당의 김영규후보는 2만 2,063 표, 호국당의 김길수후보는 5만 1,104표를 획득하였다.

정 당	입후보자	전국투표	본군투표	비 고
한나라당	이회창	11,443,279	1,132	
민주당	노무현	12,014,277	14,330	당 선
하나로연합	이한동	74,027	239	
민주노동당	권영길	957,148	408	
사회당	김영규	22,063	60	
호국당	김길수	51,104	175	

18. 제17 대 대통령 선거

제17대 대통령 선거에는 총 유권자 3,765 만3,519명 중 2,377 만2,854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63.02%의 투표율을 보였다.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후보는 1,149만 2,389 표, 대통합민주당 정동영후보는 617만 4,681 표, 민주노동당 권영길후보는 71 만 2,121표, 민주당 이인제후보는 16 만 708표, 창조한국당 문국현후보는 137만 5,489표,

참민주연합 전근모후보는 1만 5,380표, 경제공화당 허경영후보는 9만 6,757표, 새시대참사랑연합 전관 후보 7,161표, 한국사회당 금민후보 1만 8,223표, 무소속 이회창후보 355만 9,963표를 획득하였다.

정 당	입후보자	전국투표	본군투표	비 고
대통합민주당	정동영	6,174,681	11,614	
한나라당	이명박	11,492,389	1,151	당 선
민주노동당	권영길	712,121	309	
민주당	이인제	160,708	104	
창조한국당	문국현	1,375,498	227	
참주민연합	정근모	15,380	2	
경제공화당	허경영	96,756	29	
새시대참사랑연합	전 관	7,161	12	
한국사회당	금 민	18,223	15	
무소속	이회창	3,559,963	602	

제2절 국회의원 선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제헌의원을 선출한 이후 2008년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18차례의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면서 서구식 민주주의를 최초로 도입한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선거제도를 적용해 왔다.

제1대에서 제8대까지는 소선거구제가 채택되었고, 제6·7·8대에는 무소속 입후보가 금지된 상태에서 소선거구제에 비례대표제가 가미되었다. 제9·10대는 중선거구제와 유통회 제도가, 제11·12대는 중선거구제에 비례대표제가 가미된 형태였다. 그리고 제13대 이후부터는 소선거구방식에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다.

1. 제헌(制憲) 국회의원(國會議員) 선거

우리가 갈망하던 자주독립 정부는 어수선한 사회적 상황에서 급기야 1948년 2월 16일 「유엔」소총회(小總會)에서 결의되어, 동년 3월 19일 공포한 군정법령(軍政法令)제17호와 국회의원 선거법(選舉法)에 의거하여, 선거가 가

능한 지역인 남한에서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의 감시 하에 동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우후죽순(雨後竹筍)격으로 나타난 정당들은 당시의 정치 분위기를 충분히 나타내준다.

5·10 총선거도 이승만 노선을 지지해 오던 대한독립촉성회와 한국민주당이 제헌국회에서 수위(首位)를 차지하게 되었다. 제헌국회 의원을 선거한 투표 결과 대한독립촉성국민회(大韓獨立促成國民會)가 55명,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이 29명, 대동청년단(大同靑年團)이 12명, 조선민족청년단(朝鮮民族靑年團)이 6명, 기타 정당단체가 13명이고, 무소속이 85명이었다.

이 고장 장수의 선거 결과는 아래와 같다. 투표율은 96.9%였으며 유효투표율은 96.5%였다.

정 당	입후보자	득표수
무소속	김봉두	14,850 당선
독립촉성회	유순형	7,488
무소속	오일승	4,002
대동청년단	송주호	1,256

2. 제2대 국회의원 선거

1948년에 실시한 제헌국회의원은 임기가 2년이었고,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였다. 2대 국회의원선거는 1950년 5월 30일에 실시되었다.

【장수군의 입후보자 득표수】

정 당	입후보자	득표수
무소속	김우성	4,985 당선
무소속	장병준	2,739
무소속	오삼홍	2,688
무소속	한두석	2,286
무소속	오일승	2,616
무소속	김봉두	2,166
무소속	이만섭	2,387
무소속	박문보	1,210
국민당	유동렬	1,811
무소속	김태진	483
무소속	문병희	283
노동당	유인철	734
무소속	정종현	기권

3. 제3 대 국회의원 선거

1948년 5월 10일 역사적인 총선거를 실시하고, 1950년 5월 30일에 2대 국회의원선거와 4년 후인 54년에 3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 고장에서도 8명의 입후보자가 난립 하였는데, 정당 추천으로는 송영선(宋泳璿)이 자유당(自由黨)공천을 받았고, 강인선(姜仁善)이 국민회(國民會)의 추천, 그리고 6명의 후보자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선거 후 득표결과와 후보자들의 명단】

정 당	입후보자	득표수	정당	입후보자	득표수
무소속	정준모	6,622 당선	무소속	김우성	2,450
자유당	송영선	5,299	무소속	김봉두	1,762
무소속	장병운	2,615	국민회	강인선	447
무소속	김응만	4,026	무소속	한두석	기권

8명이 난립한 선거는 무소속 정준모(鄭準模)가 6,622표로 당선되었는데 국회개원 즉시 자유당(自由黨)에 입당하였다. 의사 출신인 정준모 의원은 보건사회부장관을 겸임하였고, 자유당의 온건파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4. 제4 대 국회의원 선거

1958년 5월 2일에 제4대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였는데, 한마디로 민권(民權)과 관권(官權)의 선거였다.

더구나 민주회생(民主回生)의 상징으로 많은 국민의 신임을 받았던 신익희(申翼熙)가 1956년 5월 5일 사망하자, 재집권한 자유당(自由黨)의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나 부통령(副統領)은 최대의 권력(權力)과 금력(金力)이 총동원되었던 이기붕을 제치고 장면(張勉)이 당선되었다.

부통령선거는 이승만대통령이 재직 중에 사망할 경우의 후계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선거였다.

그러나 5·2선거에서 자유당이 126석, 민주당이 79석을 차지하자 대반전을 하게 된 자유당은 1958년 12월 24일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을 통과시켰고, 인력(人力)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총동원하여 야당탄압(野黨彈壓)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장수군 후보자별 정당과 득표수】

정 당	입후보자	득표수
자유당	정준모	12,007 당선
민주당	송영선	7,328
무소속	최연식	4,568
무소속	홍양춘	1,432
무소속	김봉두	1,330

5. 제5대 국회의원(民·參議員) 선거

이승만 대통령은 4·19로 대통령직 사임서를 국회에 보내고 허정(許政)에게 정부를 위임하고 망명하였다.

허정 내각은 과도정부를 인수받아 헌법을 개정했다. 상·하 양원제로 국회를 구성하고 정부를 조직하여 1960년 7월 29일로 국회의원 선거일을 결정하였다. 이 때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동시에 선출하였다

【장수군 제5대 민의원 선거의 정당별 입후보자와 투표결과】

정 당	입후보자	득표수
무소속	송영선	6,567 당선
민주당	김응만	6,307
무소속	한정식	4,064
무소속	최성석	4,037
무소속	최연식	2,321
무소속	정준모	3,991
무소속	이상민	2,160

한편 상원인 참의원 선거는 도내 전역이 대선거구였으며, 6년제 3명과 3년제 3명 등 6명을 선출하였다.

6년제 당선자는 소선규(蘇宣奎), 강택수(姜澤秀), 송방용(宋邦鏞) 등이고 3년제 당선자는 양춘근(梁春根), 엄병학(嚴秉學), 엄민영(嚴敏永) 등 이었다.

【후보자들의 정당과 득표수】

정 당	입후보자	득표수	정 당	입후보자	득표수
무소속	양춘근	163,181	무소속	이우식	91,748
민주당	강택수	197,071	민주당	김기옥	124,514
민주당	유수복	133,392	자유당	이요한	78,984
민주당	엄민영	133,459	무소속	노경식	46,668
무소속	이승목	53,734	민주당	엄병학	139,983
무소속	송방용	165,206	민주당	소선규	264,695
민주당	민정식	사 퇴	자유당	김수학	67,259
자유당	신규식	93,573	무소속	김봉두	78,887
무소속	박동근	53,740	무소속	김대용	사 퇴

상·하 양원에서는 대통령에 윤보선(尹潽善)씨, 내각수반에 장면(張勉)씨를 인준하였다.

6. 제6대 국회의원 선거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에 의하여 헌정이 일시 중단되고 정변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정변정부는 1963년에 민정이양을 하기 위하여 내각책임제의 권력 구조를 대통령 책임제로 환원하고, 헌법 개정안을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시키고 1963년 1월 16일 개정헌법을 공포하였다. 그리하여 1963년 10월 15일 대통령선거를 실시하고, 동년 11월 26일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국회의원의 정수는 지역구 131명, 전국구 44명, 총 175명이었는데 전국적으로 지역구 847명 전국구 154명으로 1,001명이 각각 입후보하여 지역구 6.5배, 전국구 3.5배의 경쟁률을 보였다.

군사(軍事)정변에서 민정으로 이양하고 헌정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1963년 11월 26일 총선거를 실시하였으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거구를 지역구와 전국구의 2원으로 구분하고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병용 채택하였다.

또한 입후보자의 자격요건으로 정당의 추천 없이는 입후보 할 수 없도록 헌법, 정당법, 국회의원 선거법에 규정하여 무소속의 입후보를 봉쇄하였다. 이 제도에 따라서 장수, 무주, 진안에서 1명을 선출하게 되었다. 6명이 입후보하였는데 모두가 공익정당을 등에 진 공천후보자들이었다.

정 당	입후보자	득표수
공 화 당	전후상	32,132 당선
자 민 당	김진원	11,610
민 정 당	오치환	11,551
민 주 당	최성석	10,076
정 민 회	이옥동	9,952
보 수 당	김봉두	2,616

7. 제7대 국회의원 선거

제7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1967년 6월 8일에 실시되었다. 6개 정당에서 각각 공천 후보자를 내어 실시하였는데 각 정당별 입후보자와 득표수는 아래와 같다.

이 고장의 국회의원 선거구역은 장수, 무주, 진안이었다.

정 당	입후보자	득표수
공 화 당	전후상	74,385 당선
신 민 당	최성석	13,092
대 중 당	박정은	6,630
자 유 당	김진원	4,002
한 독 당	박수산	1,889
민 주 당	최필용	1,171

8. 제8대 국회의원 선거

1971년 5월 25일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도 역시 장수, 무주, 진안 3개 군이 1구에서 실시되었다.

공화당의 길병전, 신민당의 최성석 두 후보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는데 표차도 크지 않았다. 공화당 길병전이 25,558표를 얻었으며, 신민당 최성석이 25,137표를 얻었다.

득표차는 421표로 길병전후보가 당선되었으나 개표부정이라는 불미스런 소송으로 재개표한 결과 오히려 공화당의 무효표가 유효표로 판정되어 당선자인 공화당 길병전후보 표가 늘어났다.

결국 공화당 길병전 25,558표, 신민당 최성석 25,137표로 결정되었다. 이 때 비례대표제로 장수출신의 국회의원 전정구씨가 당선되어 장수출신 국회의원이 처음 탄생되었다.

전정구의원은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파곡마을 출신으로 서울상대 졸업과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민주공화당 중앙청년국장을 역임한 변호사였다.

9. 제9 대 국회의원 선거

1973년 2월 27일에 실시된 9대 국회의원 선거는 유신헌법에 따라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였다.

총선 국회의원 선거를 지역구와 전국구로 구분했던 제도를 폐지하고, 중선거구제(中選舉區制)를 마련하여 1선거구에 2명씩 국회의원을 뽑게 되었다.

당시선거는 여·야 양대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방대(龐大)한 공조직(公組織)을 가지고 있는 정당세력에 의하여 당락(當落)이 좌우될 것이라는 것이어서 선거보다도 정당의 공천(公薦)에 관심이 쏠렸었다.

또한 무소속 출마를 허용하였으나 방대한 지역을 개인의 힘으로 관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임기는 대통령 임기를 따라서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는 정족수(定足數) 219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3명인데 이들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으며, 전북(全北)에서는 6개 선거구에서 민주공화당과 신민당은 4명씩 당선되었으며, 무소속은 11명 입후보하여 4명이 당선되어 민주공화당과 신민당 그리고 무소속 동일 비율로 당선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수, 무주, 진안 지역의 정당별 입후보자는 공화당 1명, 신민당 1명, 무소속 3명으로 5명이 경쟁했다. 이때 본 지역에서는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정 당	입후보자	득표수
신민당	최성석	16,874 당선
무소속	김광수	4,038 당선
공화당	전휴상	2,644
무소속	김현모	2,152
무소속	김봉관	1,842

10. 제10 대 국회의원 선거

1978년 12월 12일은 유신 2대 국회의원 총 선거일이었다. 이 고장에는 8명의 후보들이 난립하였다.

【정당소속과 각 후보자의 득표수】

정 당	입후보자	득표수
공화당	김광수	8,279 당선
신민당	최성석	14,098 당선
통민당	이복동	118
무소속	김덕규	671
무소속	김봉관	682
무소속	오상현	1,776
무소속	이상옥	774
무소속	허재송	492

11.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11 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1981 년 3 월 25 일에 실시되었는데, 이때 본 지역의 정당별 입후보자는 민정당의 황인성, 민주당에 이상옥, 민한당에 오상현 등이 경합했다.

【정당소속과 각 후보자의 득표수】

정 당	입후보자	득표수
민정당	황인성	15,816 당선
민한당	오상현	5,087 당선
민주당	이상옥	4,168

12.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12 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1985 년 2 월 12 일에 실시되었다. 당시 본 지역의 선거는 4 개 정당에서 각각 입후보자를 내어 경합하였는데 득표수와 당선자는 다음과 같다.

정 당	입후보자	득표수
민정당	전병우	10,720 당선
평민당	이상옥	5,243 당선
국민당	김광수	4,997
민한당	오상현	3,572

13.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13 대 국회의원선거는 1988 년 4 월 26 일에 실시되었는데 본 지역의 정당별 후보자와 득표수는 아래와 같다.

장수, 무주, 진안 등 3 개 군 득표 합산 수는 아래와 같다.

정 당	입후보자	득표수
민주정의당	전병우	7,147
평화민주당	이상옥	14,282 당선
신민주공화당	최규홍	587

민주정의당 전병우 29,901 표, 평화민주당 이상옥 43,367 표, 신민주공화당 최규홍 1,173 표

14. 제14 대 국회의원 선거

문민정부 이후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는 과거와 같이 선거구가 장수, 진안, 무주였다. 1992년 3월 24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주 출신인 민주자유당의 황인성후보와 진안출신인 민주당의 오상현후보, 같은 진안출신인 통일국민당의 이상옥후보가 출마하였는데 투표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 당	입후보자	장·진·무 득표	본군득표	비 고
민주자유당	황인성	32,280	8,950	당선
민주당	오상현	24,989	8,259	
통일국민당	이상옥	5,962	1,309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평화민주당의 이상옥후보가 황색바람을 타고 절대다수의 득표로 당선되었으나 금번에는 당을 달리하여 낙선되었다. 민주자유당의 황인성후보는 전라북도에서 민주당 입후보자를 제치고 유일하게 당선되었다.

장수, 진안, 무주의 총 유권자 수는 79,673명이었는데 80.7%인 64,333명이 투표에 참가하였다. 본 군에서는 23,598명의 총 유권자 중 79.9%인 18,84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15.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1996년 4월 11일에 치러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장수 출신의 정장현이 신한국당으로 입후보하였고, 진안에서는 정세균후보가 새정치국민회의로 이상옥후보가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였으며, 무주출신 최팔용후보가 민주당으로 입후보하였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구도 장수, 무주, 진안이었는데 총 유권자 75,215명 중 73.1%인 54,988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새정치국민회의의 정세균후보를 36,176표로 당선시켰다.

자세한 득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 당	입후보자	장·진·무 득표	본군득표	비 고
신한국당	정장현	12,869	4,664	
새정치국민회의	정세균	36,176	10,365	당선
통합민주당	최팔용	1,462	419	
무소속	이상옥	2,027	470	

16. 제16 대 국회의원 선거



제16대 국회의원 합동연설회

2000년 4월 13일에 치러진 16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한나라당 이광국, 새천년민주당 정세균, 자유민주연합 김광수, 민주국민당 백완승후보가 입후보 하였다.

16 대 국회의원 선거구로는 무주, 진안, 장수군이었는데, 총 유권자 70,912명 중 76.1%인 53,450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새천년 민주당 정세균 후보가 34,165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 당	입후보자	장·진·무 득표	본군득표	비 고
한나라당	이광국	1,244	255	
새천년민주당	정세균	34,165	10,680	당선
자유민주연합	김광수	15,224	4,854	
민주국민당	백완승	1,811	490	

17. 제17 대 국회의원 선거

2004년 4월 15일 실시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새천년민주당 양영두, 열린우리당 정세균후보가 입후보하였다.

17 대 국회의원 선거구는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이었는데, 총 유권자 92,592명 중 65.03%인 60,314 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열린우리당 정세균 후보가 45,475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 당	입후보자	장·진·무 득표	본군득표	비 고
새천년민주당	양영두	12,765	2,474	
열린우리당	정세균	45,475	10,272	당선

18. 제18 대 국회의원 선거

제18 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통합민주당 정세균, 한나라당 장용진, 자유선진당 박병관, 평화통일가정당 최대식후보가 입후보하였다. 18 대 국회의원 선거구는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이었는데 총 유권자 91,154명 중 54.02%인 49,250 명이 참여하여 통합민주당 정세균후보가 35,566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 당	입후보자	장·진·무 득표	본군득표	비 고
통합민주당	정세균	35,566	7,918	당선
한나라당	장용진	5,024	897	
자유선진당	박병관	3,361	456	
평화통일가정당	최대식	4,108	1,480	

제3 절 지방선거

1. 지방선거의 개관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전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물론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의 전통이 있었지만, 제헌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가 당시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수준을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지방자치는 밑으로부터의 요구나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었다.

여야 사이에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지방자치 실시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도 중앙정치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었을 뿐 지방자치의 활성화 등 지방자치의 본질을 둘러싼 대립은 별로 없었다. 이것은 선거운동과정에서도 그대로 드

러난다.

지방선거에서 지방정치 차원의 정책대결이 아니라 중앙정치 차원의 정책대결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 4일에 제정(법률 제32호)되었고, 같은 해 8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갖춘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2단계로 나누었다. 서울특별시·도의회선거와 시·읍·면의회선거의 2단계였다. 군은 연락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았다.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임명제였고, 시·읍·면장은 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기로 하였다.

지방선거가 치러지기도 전인 1949년 12월 15일에 「지방자치법」이 1차 개정(법률 73호)되었다. 의회구성 때까지 시·읍·면장은 임명제로 하고, 의회의 기능은 상급행정기관이 대행하는 것이었다. 정부수립 이후 지방의회 구성은 행정체제의 미비와 불안한 치안상태를 명분으로 연기되었으며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지방선거는 실시되지 않았다.

1952년 4월부터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나기 전까지 9년1개월 동안 지방자치를 실시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1960년 12월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당시 이승만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한 지지 세력으로 지방자치를 이용하였으며 그마저도 5개월 만에 5·16군사정변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지방의회를 해산시키고, 「국가재건비상조치법」제20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 인구 15만명이상 시(市)의 장은 내각이 임명하고, 기타 자치단체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다.

9월 1일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707호)을 공포했는데, 이 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법의 규정이 효력 정지되고, 지방자치권은 정지되었으며, 읍·면은 빼고 군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읍·면은 단순한 하부행정기관이 되었다. 의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와 도는 내무부 장관이, 시·군은 도지사가 수행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행정단위가 되고 말았다.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헌법 제110조 제2항). 그러나 헌법 부칙에서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의회의 구성시기를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헌법 부칙 제7조 제3

항)을 됴으로써 사실상 지방자치의 실시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1972년 유신헌법에서는 제3공화국 헌법의 지방자치 조항과 동일하게 하면서 지방자치 미실시를 밝혀 놓았다. 지방의회를 통일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이다(헌법 부칙 제10 조).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지방자치 실시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을 완화시켰다. 지방의회 구성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하되 그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이다(헌법 부칙 제10 조). 그러나 역시 지방자치는 실시되지 않았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은 권력의 중앙 집중화를 꾀했으므로 지방자치를 유보했다. 지방자치가 집권여당의 권력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실시, 즉 분권화가 1980년대 한국정치에서 민주화의 상징 가운데 하나였기에 야당은 끊임없이 지방자치 실시를 요구했다. 여당도 실시의지는 없으면서 지방자치를 선거공약에서 빼놓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1980년대 후반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시작한 후 지방자치도 부활하게 되었다.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가 중단된 지 30년 만인 1991년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제5공화국 헌법 부칙에 있던 지방자치 유보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지방자치에 대한 장을 신설했다(헌법 제8장 제117·118조). 1988년 3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법률 제4004호).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광역과 기초로 구분했다.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이고, 기초단체는 시·군·자치구이다. 야(野)3당이 자치단체장 선거를 지방의회 선거보다 먼저 실시하고, 읍·면·동장까지 직선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1989년 3월에 통과시켰으나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었다.

1990년 초 3당 합당을 통해 여대야소가 된 뒤 여당은 지방선거를 일방적으로 연기시켰다. 이에 반발한 김대중 야당 총재의 단식 투쟁 등 강력한 투쟁 끝에 비로소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1991년 3월 26일 기초자치단체의원 4,277명, 6월 20일 광역의원 866명이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부담을 느

킨 노태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법정기간 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연기되었다.

그런데 1991년 지방의원 선거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지방자치관련법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외형적으로나마 본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것은 1995년 6월 27일 동시선거였으며, 지방의회의원과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즉, 6·27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어 광역자치단체장 15명, 기초자치단체장 230명, 기초의회의원 4,645명, 광역의회의원 866명을 선출했다. 이 선거는 문민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와 '김대중의 정치 복귀'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 강했다. 6·27 지방선거에서 특이할 점은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측현상을 그대로 보여 주며 여소야대 구조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지역주의를 기초로 한 민자당(영남), 민주당(호남), 자민련(충청)이라는 중앙정치 구도가 지방선거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1987년의 제13대 대통령 선거와 1988년의 4·26 총선 때 나타난 지역주의 정당구조가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6·27 지방선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노동·시민후보의 부분적 진출이다. 환경운동연합에서 46명의 후보를 출마시켰는데 31명(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25명)이 당선되었다. 31명 가운데 정당의 공천을 받은 경우는 4명이고, 나머지 27명은 무소속이었다. 민주노총은 27명을 출마시켜서 15명을 당선시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56명을 출마시켜 16명(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11명)이 당선되었다. 여성단체연합은 17명을 출마시켜 14명(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12명)을 당선시켰다. 민주노총 준비위원회는 29명을 출마시켰는데 17명(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4명)이 당선되었다. 한국노동운동운동협의회는 출마자 4명(기초의원 4명)이 모두 당선되었다.

그 밖에 진보정당추진위원회는 13명의 출마자에 4명(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3명)의 당선자를 냈다. 민중정치연합은 11명의 출마자 중 2명(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1명)을 당선시켰다.

1998년 6월 4일에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6·4 지방선거는 1기 민선지방자치에 대한 평가와 국민의 정부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라는 성격을 띠었다. 투표율이 역대 치러진 전국 단위의 선거 가운데 두

번째로 낮고, 1961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립된 이후로도 가장 낮은 52.6%에 지나지 않았다. 6·4 지방선거의 주요 특징은 지역분할 현상과 현직자의 높은 재선을, 무소속의 부진 등이다.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낮았던 까닭에 정책과 공약 등 구체적인 것보다는 정당과 현직여부 등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쉬운 것을 후보 선택 기준으로 삼았다.

지역분할은 공동정부를 구성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연합 공천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이 지방선거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노동·시민 후보의 진출이다. 민주노총과 국민승리21이 내세운 49명의 후보 가운데 23명(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18명)이 당선되었다. 무소속 당선이 상대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47%의 당선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이다.

한국노총도 정책연합으로 여야당의 후보로 공천을 받아 78명의 후보가 출마하였는데 그 가운데 41명(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비례대표 10명 포함 17명, 기초의원 23명)이 당선되었다.

6·4 지방선거에서 노동 후보의 약진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5·16 군사정변 이후 노동조합 후보를 처음으로 공식 추천하고 지지를 표명했다는 의의가 더 클 것이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에서 출마시킨 후보는 모두 22명이었고, 이 가운데 9명(기초단체장 1명, 기초의원 8명)이 당선되었다. 농민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출마시킨 35명의 후보 중에서는 21명(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16명)이 당선되었다.

역시 농민단체인 한국농어민후계자연합회는 300여 명을 출마시켜 135명(광역의원 18명, 기초의원 117명)을 당선시켰다. 여성단체연합은 현행 선거법에 묶여 공식후보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선거에 출마한 19명의 여성후보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2002년 6월 13일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6·13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48.9%로 전국단위 선거 가운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역대 선거에서 나타났던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되풀이되어 지역별 정당분할구도가 이전보다 더 두드러졌다.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장 소속정당과 광역의회 과반수 정당이 동일했다. 이 가운데 12개 시·도에서는 동일정당이 기초단체장까지 다수를 차지했다.

영남지역에서는 한나라당이, 호남지역에서는 민주당이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기초단체장을 모두 차지했으며, 62.8%의 득표율로 광역의회의 95.4%를 차지했고, 60.2%의 득표율로 기초단체장의 84.7%를 차지했다. 민주당은 호남지역에서 광역단체장을 모두 차지했고, 54.8%의 득표율로 광역의회의 92.6%를 차지했으며, 49.1%의 득표율로 기초단체장의 70.7%를 차지했다. 자민련은 충남지역에서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했으나 기초단체장의 과반수를 차지하지는 못했다. 6·13 지방선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민주노동당의 약진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당투표에서 8.13%를 얻어 충청권을 지역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민련을 뛰어넘어 제3당으로 부상했다.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과거와는 다른 정치 상황에서 실시되었다.

첫째,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도입이다. 기초의원 후보자 기호를 정당별로 주게 되어 정당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즉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인 있거나 지난 선거에서 3%이상 득표한 경우 전국적으로 같은 기호를 주게 된다는 조항을 삽입한 결과 정당 중심의 선거로 중앙당의 권력이 더욱 강화되어 지방정치가 중앙에 종속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무소속 후보는 기초의원의 경우에도 더욱 불리하게 되었다.

둘째,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다. 기초의회 선거에 정당공천제가 도입됨에 따라 비례대표제도 같이 도입하였다. 지난 선거에는 광역의회에만 도입하였는데, 이번에는 기초의회까지 적용하였다. 비례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 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도록 하였으며(제23조 제3항), 특히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으로 추천하고 후보자 명부 순위의 홀수에 두도록 하여 여성의 진출을 도모하였다.

셋째, 기초의원 선거를 중선거구로 개정하여 한 선거구에 2인 이상 4인 이하 의원을 선출하였다. 그런데 4인 선거구는 일부지역에만 적용하고, 대부분은 2~3인 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넷째,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유급제를 채택하였다. 그동안 지방의원은 회의수당 등을 지급하는 명예직이었으나, 선거법 개정으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유급제를 채택하였다. 즉 회기수당을 월정 수당으로 전환하고, 의정활동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의원 유급제에 따라 광역의원의 정수는 그대로 두었으나, 기초의원의 정수는 20%를 감소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인구가 적은 기초의회 의 경우, 최소 의원의 정수가 7명인 지역도 상당수 있어 의사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염려되는 곳도 있다.

여섯째, 지방의원을 유급제로 전환함에 따라 전문 인력들이 지방의회에 대거 진입하여 지방의원의 질적인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젊은층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일곱째, 여성 추천 보조금 차등 지급이다. 여성후보를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에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에 따라 추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되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지급하고 여성후보자의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여덟째, 예비후보자 제도의 도입이다. 예비후보 활동기간은 120일 전부터이며, 이러한 기간연장은 정치 신인들의 사전 선거운동이 제약되어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이전의 선거제도가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예비 후보의 선거운동 비용은 보전되지 않은 불리한 점도 있다.

아홉째, 선거 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영주 체류의 자격 취득일이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것은 세계화 추세를 감안한 요소이다. 이 외에도 예비후보, 배우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중 1명은 명함을 돌리는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는 지방선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초기에 지방자치가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중앙정치의 수단으로 취급되어 발전되지 못하였으나, 1991년 지방의회 선거 이후 점차 발전되고 있다. 지금까지 실시된 역대 지방선거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역대 지방선거 실시 상황】

선거명	선거일	지방자치단체수 (선거구수)	선거실시 지방자치단체수 (선거구수)	정 수
시·읍·면의회의원선거	1952. 1. 25.	1,542	1,397	17,559
도회의의원 선거	1952. 5. 10.	9	7	306
시·읍·면의회의원선거	1952. 8. 8.	1,491	1,458	16,961
시·읍·면장 선거	1956. 8. 8.	1,491	580	1,491

선거명	선거일	지방자치단체수 (선거구수)	선거일시 지방자치단체수 (선거구수)	정 수
시·도회의원 선거	1956. 8. 13.	10	10	437
시·도회의원 선거	1960. 12. 12.	10	10	487
시·읍·면의회의원 선거	1960. 12. 19.	1,518	1,468	16,909
시·읍·면장선거	1960. 12. 26.	1,468	1,468	1,468
서울시장·도지사 선거	1960. 12. 29.	10	10	10
구시군의회의원 선거	1991. 3. 26.	3,562	3,562	4,304
시도의회의원 선거	1991. 6. 20.	866	866	866
제1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1995. 6. 27	4,885	4,885	5,758
제2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1998. 6. 4.	4,347	4,347	4,428
제3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2002. 6. 13.	4,331	4,331	4,414
제4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2006. 5. 31.	2,180	2,180	3,867
제5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2010. 6. 2	2,045	2,045	3,649

2. 기초의회 의원 선거

가. 제1기 기초의회 의원 선거¹⁾

1) 초대 면의회 의원 선거

제1차 개정 선거법에 의하여 1952년 4월 25일 초대 면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 후 제2대와 제3대 면의회 의원선거는 제2차 개정 선거법의 인구 1만까지는 11명으로 하고, 1만을 넘는 때는 1만부터 1명을 증가토록 한 규정에 의하여 1956년 8월 8일과 1960년 12월 19일에 각각 실시되었다.

가) 장수면(읍) 초대 면의회 의원

의 장 : 이규섭(李圭涉)

의 원 : 이재갑(李在甲), 조규천(曹圭天), 이규민(李珪珉), 백일인(白日寅), 정기병(鄭琪柄), 신도광(申道光), 모차봉(牟次鳳), 장갑동(張甲童), 최영식(崔永植), 차동순(車同順), 이영근(李永根), 이상용(李相龍)

나) 산서면 초대 면의회 의원

의 장 : 최영우(崔泳宇)

의 원 : 안양섭(安亮燮), 권흥옥(權興玉), 육종진(陸鍾鎭), 김정희(金貞喜), 홍성우, 김환철(金煥喆), 양해석(梁海錫), 이근우(李根雨), 양해선

1) 註 : 일부 면의원(面議員)의 명단이 자료 불충분으로 누락되었음.

(梁海先), 권종옥(權鍾玉), 권채희(權采熙)

다) 번암면 초대 면의회 의원

의 장 : 장녹이

의 원 : 송세현, 도상규, 형정오, 배능상, 김용배, 배영수, 박정엽, 장문섭,
이기화, 장봉엽, 이종현

라) 장계면 초대 면의회 의원

의 장 : 장삼규(張三圭)

의 원 : 임길수(林吉洙), 이규철(李揆哲), 권병덕(權丙德), 강윤기(姜允基),
신현빈(申鉉彬), 정남용(鄭南鎔), 한순기(韓順基), 윤금암(尹金岩),
전맹조(全孟祥), 변상기(卞常璣), 이금송(李金崇)

마) 천천면 초대 면의회 의원

의 장 : 송금룡(宋金龍)

의 원 : 서복동(徐卜同), 조옥남(曹玉南), 김정기(金正基), 태문섭(太文燮),
한명석(韓明錫), 최용훈(崔容勳), 서문찬옥(西門燦玉), 송장현(宋長鉉),
이화복(李花馥)

바) 계남면 초대 면의회 의원

의 장 : 최규옥

의 원 : 김정조, 심경출, 김판덕, 김희옥, 진병무, 박종화, 박삼수, 송제만,
김희석, 양종윤, 김재영

사) 계북면 초대 면의회 의원

의 장 : 김영옥(金永玉)

의 원 : 이종래(李鍾來), 한병갑(韓秉甲), 서천생(徐千生), 정성모(鄭成謨),
한병관(韓秉寬), 송관성(宋官成), 이윤권(李允權), 공영기(孔泳基),
이상순(李相淳)

2) 제2대 면의회 의원 선거

1956년 8월 8일 실시했는데 전국에서 24,712명이 입후보하여 15,548명

이 당선되었는데 여기서 자유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였다.

전라북도의 경우 166 개면에서 3,149 명이 입후보하여 1,788 명이 당선되었는데, 전라북도 또한 자유당이 1,192 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민주당 50 명, 국민당 2 명, 농민당 1 명, 무소속 534 명, 기타 9 명으로 되어있다.

가) 장수면(음) 제2대 면의회 의원

의 장 : 이재순(李在淳)

의 원 : 이재갑(李在甲), 이영수(李永秀), 이상용(李相龍), 오동선(吳東善), 전명언(全明彦)(보궐), 허준명(許俊明), 정인택(鄭仁宅), 최영식(崔永植), 차동순(車同順), 이영근(李永根), 이희진(李熙鎭), 장갑동(張甲童)

나) 산서면 제2대 면의회 의원

의 장 : 안종기(安鍾己)

의 원 : 김용진(金容珍), 양승한(梁承漢), 이건우(李建雨), 이영(李榮), 김의식(金義植), 최태수(崔泰秀), 정철수(丁哲洙), 권채희(權采熙), 권인옥(權仁沃), 육종진(陸鍾鎭), 김원영(金元永)

다) 번암면 제2대 면의회 의원

의 장 : 장재영

의 원 : 김성순, 김대규, 박종섭, 장교상, 김완주, 전한철, 장진영, 장덕찬, 김명진

라) 장계면 제2대 면의회 의원

의 장 : 이종화(李宗和)

의 원 : 이한규(李漢奎), 임철수(林喆洙), 박환중(朴煥仲), 서한중(徐漢宗), 한병두(韓秉斗), 서삼동(徐三童), 문종환(文鍾煥), 정인필(鄭寅弼), 유영환(柳榮煥), 이관봉(李判鳳), 서문창(西門昌)

마) 천천면 제2대 면의회 의원

의 장 : 김승구(金承九)

의 원 : 김동순(金東順), 박창선(朴昌先), 김영환(金永煥), 박희숙(朴喜淑),

한진석(韓鎭錫), 최용택(崔容澤), 이화복(李花馥), 송금룡(宋今龍),
송장현(宋長鉉), 배옥선(裴玉善), 오복영(吳福永)

바) 계남면 제2대 면의회 의원

의 장 : 최규옥

의 원 : 김정조, 심정출, 김판덕, 김희옥, 진병무, 박종화, 박삼수, 송제만,
양종윤, 김재영

사) 계북면 제2대 면의회 의원

의 장 : 정성모(鄭成謨)

의 원 : 송관성(宋官成), 김영옥(金永玉), 송기태(宋基泰), 박용환(朴用煥),
한병섭(韓秉燮), 한병관(韓秉寬), 공영기(孔泳基), 이상순(李相淳),
이기현(李基鉉), 조창호(趙昌鎬)

3) 제3대 면의회 의원 선거

1960년 12월 19일에 실시되었다. 전북에서는 3,465명이 입후보하여, 면
의원 정수 1,763명에 대해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유권자 812,013명 중
702,168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86.5%의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무소
속 1,350명, 민주당 372명, 신민당 37명, 기타 3명이 당선되었다.

가) 장수면(읍) 제3대 면의회 의원

의 장 : 김형태(金炯泰)

의 원 : 배운선(裴允善), 김인식(金仁植), 이수현(李秀炫), 이영수(李永秀),
김성봉(金性奉), 황청룡(黃靑龍), 김용기(金容基), 유기열(劉琪烈),
양용길(梁容吉), 최영식(崔永植), 최영만(崔永萬), 이희진(李熙鎭)

나) 산서면 제3대 면의회 의원

의 장 : 육중철(陸鍾喆)

의 원 : 권인옥(權仁玉), 최규환(崔圭煥), 조용운(趙庸潤), 이수연, 장제호
(張濟浩), 김삼수(金三壽), 김원영(金元永), 윤병호(尹丙浩), 홍종기
(洪鍾基), 이병순(李炳舜), 정철수(丁哲洙)

다) 번암면 제3대 면의회 의원

의 장 : 장교상

의 원 : 김성순, 모천수, 정두식, 전한철, 김완주, 장진영, 장덕찬, 장문현,
김명진, 백봉암

라) 장계면 제3대 면의회 의원

의 장 : 한병두

의 원 : 최종식, 한영석, 원두희, 서한중, 김봉엽, 송기룡, 정인기, 강기원

마) 천천면 제3대 면의회 의원

의 장 : 김진선 (金鎭宣)

의 원 : 서판룡(徐判龍), 박남수(朴南守), 송금룡(宋金龍), 고인옥(高麟玉),
장동섭(張司燮), 한근석(韓瑾錫), 박복구(朴福九), 이종엽(李鍾曄),
조옥남(曹玉男)

바) 계남면 제3대 면의회 의원

의 장 : 송제만

의 원 : 최규옥, 김정조, 심정출, 김판덕, 김희옥, 진병우, 박종화, 박삼수,
김희석, 양종윤, 김재영

사) 계북면 제3대 면의회 의원

의 장 : 김영옥(金永玉)

의 원 : 육종기(陸鍾紀), 김계창(金季昌), 이승민(李承敏), 한경훈(韓京勳),
이종성(李鍾星), 공영기(孔泳基), 정성모(鄭成謨), 이기현(李基鉉),
한병관(韓秉寬), 이상순(李相淳)

나. 제2기 기초의회 의원 선거

1) 제1대 군 의원 선거

기초의회 의원선거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보다 4년 앞서 실시되어, 기초자치단체의 풀뿌리 민주주의보다 4년 앞서 실시된 셈이다. 임명제 군수와 선거제에 의해 구성된 기초의회 이는 성질이 다른 자치제도가 공존한 셈이다.

1991년 3월 26일에 실시된 군의회 의원선거는 각 읍·면별로 1인씩 선

출되었는데 장수읍에서는 최봉철후보가, 산서면에서는 정상윤후보가, 번암면에서는 김명수후보가, 장계면에서는 김인배후보가, 천천면에서는 최용득후보가, 계남면에서는 김치곤후보가, 계북면에서는 정희택후보가 당선되어 장수군의회를 구성하였다.

원 구성 이후 초대의장에 최용득의원이, 부의장에는 최봉철의원이 당선되었고, 하반기 의장에는 정상윤의원이, 부의장에는 정희택의원이 당선되어 지방발전을 위해 힘썼다. 기초의회 의원, 군의원은 도의원과 달리 정당소속이 배제된 점이 특징이다.

제1대 군 의원들의 득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읍면별	후보자별 득표수			비고
장 수 읍	김용기	최봉철	장경호	최봉철 당선
	1,120	1,911	1,424	
산 서 면	임순승	정상윤		정상윤 당선
	939	1,458		
번 암 면	장원선	김명수		김명수 당선
	944	1,440		
장 계 면	김인배	한원희	임재성	김인배 당선
	1,309	1,020	930	
천 천 면	최용득	박형규		최용득 당선
	1,175	925		
계 남 면	김치곤	이상돈	양종욱	김치곤 당선 보선 홍순목 당선
	796	785	287	
계 북 면	정희택	박영석		정희택 당선
	1,021	532		

※ 김치곤 사망 보선 93. 7. 2) 실시

2) 제2대 군 의원 선거

1995년 6월 27일 광역의회인 도의원과 도지사, 기초의회인 군 의원과 군수선거가 함께 치러진 제2대 군 의원 선거에서는 장수읍에서 최봉철후보가 재선되었고, 산서면에서는 마순익후보가 당선되었으며, 번암면에서는 장문엽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리고 장계면에서는 김홍기후보가, 천천면에서는 강태순후보가 당선되었고, 계북면에서는 정희택후보가 재선되었으며, 계남면에서는 홍순목후보가 무투표 당선되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읍면별	후보자별 득표수					비고
장수읍	정수영	최봉철				최봉철 당선
	1,997	2,427				
산서면	정상윤	마순익				마순익 당선
	1,027	1,266				
번암면	김명수	장문엽	최영호			장문엽 당선
	832	982	431			
장계면	최용신	김홍기	임재성	김인배	최규원	김홍기 당선
	348	1,285	491	803	473	
천천면	최용득	강태순				강태순 당선
	955	956				
계남면	홍순목					홍순목 당선
	무투표당선					
계북면	전홍구	정희택				정희택 당선
	533	911				

3) 제3대 군 의원 선거



제3대 장수군 의회 개원

1998년 6월 4일 실시한 전국동시 지방선거 제3대 군 의원 선거결과는 장수읍에서 최봉철후보가 3선되었고, 산서면에서는 육동수후보가 당선되었고, 번암면에서는 장영기후보, 장계면에서는 김홍기후보가 재선되었으며, 천천면에서는 최용득후보가 계남면에서 홍순목후보가 3선되었고, 계북

면에서는 정희택후보가 무투표 당선되었다.

【후보자별 득표상황】

읍면별	후보자별 득표수				비고
장 수 읍	최봉철	양해도	이홍선	김일곤	최봉철 당선 보선 양해도 당선
	1,657	1,570	708	376	
산 서 면	마순익	육동수			육동수 당선
	946	1,316			
번 압 면	장영기	장문엽	정대현		장영기 당선
	816	595	814		
장 계 면	김흥기	이택영			김흥기 당선
	2,066	1,055			
천 천 면	최용득	김병열	송승현		최용득 당선
	1,178	258	534		
계 남 면	홍순목	임만섭			홍순목 당선
	849	834			
계 북 면	정희택				정희택 무투표 당선

- 보궐선거 : 1999년 9월 22일 장수읍 양해도후보 무투표 당선

4) 제4대 군 의원 선거

2002년 6월13일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제4대 군 의원 선거결과는 장수읍에서 양해도후보가 당선되었고, 선서면에서는 김홍섭후보가 번암면에서는 정대현후보가 당선되었으며, 장계면에서는 김흥기후보가 3선에 당선되었고, 천천면에서는 강태순후보가 재선 계남면에서는 양종인후보가 계북면에서는 김종열후보가 당선되었다.

【후보자별 득표상황】

읍면별	후보자별 득표수				비고
장 수 읍	한영대	황수열	양해도	최봉철	양해도 당선
	447	719	1,695	1,364	
산 서 면	김홍섭	권성안			김홍섭 당선
	1,178	963			
번 압 면	장상우	정대현	김창수		정대현 당선
	692	848	582		
장 계 면	유기석	이택영	김흥기		김흥기 당선
	324	1,175	1,606		

읍면별	후보자별 득표수				비고
천 천 면	강태순	송용기			강태순 당선
	905	838			
계 남 면	임병수	양종인	송남수		양종인 당선
	608	690	395		
계 북 면	김복동	전홍구	김종열		김종열 당선
	125	586	631		

5) 제5대 군 의원 선거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제5대 군의원선거 결과는 장수군 가 선거구에서 장수읍 무소속 권광열후보, 산서면의 열린우리당 권성안후보, 민주당 유주상후보가 당선되었고, 장수군 나 선거구에서는 장계면 김홍기후보, 천천면의 오재만 열린우리당 후보가 계남면의 민주당 임병수후보가 당선되었으며, 비례대표에는 장수읍의 열린우리당 유금선후보가 당선되었다.

【후보자별 득표상황】

선거구별	후보자별 득표수									비고
장수군 가 선거구	열린 우리당	열린 우리당	열린 우리당	민주당	민주당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권성안 유주상 권광열 당선
	권성안	김창수	양해도	유주상	황수열	권광열	장상우	정대현	최용표	
	1,337	634	997	1,098	432	1,427	962	365	1,025	
장수군 나 선거구	열린 우리당	열린 우리당	민주당	민주 노동당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김홍기 오재만 임병수 당선
	김홍기	오재만	임병수	정현진	김종열	오재영	유재영			
	1,679	1,607	1,235	492	1,211	651	738			

- 비례대표 : 열린우리당 유금선후보 당선

【정당별 득표수】

계	열린우리당	민 주 당	민주노동당
15,762	7,549	4,983	3,230

6) 제6대 군 의원 선거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제6대 군의원선거 결과는 장수군 가 선거구에서 유기홍후보, 임정택후보, 이도형후보가 당선되었고, 장수군 나 선거구에서는 오재만후보, 정영모후보, 김홍기후보가 당선되었으며, 비례대표에는 최희숙후보가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후보자별 득표상황】

선거구별	후보자별 득표수							비고
장수군 가 선거구	민주당	무소속	민주당	무소속	무소속			유기홍 임정택 이도형 당선
	유기홍	권성안	임정택	이도형	양해도			
	1,701	1,507	1,794	1,521	1,326			
장수군 나 선거구	민주당	무소속	민주당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오재만 정영모 김홍기 당선
	오재만	김종문	정영모	김홍기	이택영	장정복	양종인	
	1,459	861	1,491	1,095	490	697	999	

- 비례대표 : 민주당 최희숙 후보 무투표 당선

3. 광역의원선거

가. 제1기 광역의원선거

1) 초대 도의회의원(道議會議員) 선거

1952년 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미수복지구를 제외한 전국에 걸쳐 도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고, 2월 20일 대통령령 제508호로 이를 공포하자 도내에서도 치안사정이 안정되지 못한 남원시, 순창군, 정읍시, 완주군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이 도의회 의원선거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다.

1952년 5월 10일 위의 4개 군 자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전도적인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총 89명의 입후보자 중 32명(정원 46명 중 위 선거보류지구 정원 14명 제외)이 당선되었다.

본군에서는 3명이 입후보하여 경쟁하였는데 입후보자의 소속과 당선자는 다음과 같다.

▲한청 송영선 9,870 당선 ▲자유당 오삼홍 6,630 ▲자유당 한두석

5,956

2) 제2대 도의회의원(道議會議員) 선거

1956년 8월 13일에 실시된 제2회 도 의회 의원선거는 투표율 90%를 나타내어 초대에 비해 7%의 상승을 보였으며, 전국적으로 초대에 비해 5%의 상승을 보였다.

장수군에서는 장구현(張球鉉)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이때 전북의 당선자 소속정당을 보면 자유당 22명, 무소속 16명, 민주당이 6명으로 1대 도의원 선거를 비교해 볼 때 자유당의 진출이 늘어났고 민주당은 퇴조하였다.

3) 제3대 도의회의원(道議會議員) 선거

제3대 도의원 선거는 1960년 12월 12일에 실시하였다. 4·19 학생의거 직후의 선거였다. 이때 도의원 의석은 배수로 늘어났다.

본 군의 경우 장수읍, 산서면, 변암면이 남 1구가 되어 의원 1명을 선출하였고,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이 북 1구가 되어 1명을 선출하였다. 남 3개면에서는 이근우(李根雨), 북 4개면에서는 김진영(金鎭泳)이 당선되었다.

이 무렵은 지방자치제도가 초기인 까닭에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고려하여서 서울특별시, 각 시·도, 읍·면이 자치단체가 되어 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자치단체장은 정부가 임명하도록 되었다.

시·읍·면장은 1956년에 직선제가 실시되었으나,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1960년에 비로소 직선제가 되었다.

나. 제2기 광역의원 선거

1) 제1대 도의원 선거

기초의회인 군 의회와 광역의회인 도의회가 출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골격이 30년만에 마련된 셈이다. 기초·광역 지방의회가 구성되기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민주주의의 풀뿌리가 새롭게 싹을 틔웠다는 점에서 그 경과나 선거운동 기간 동안 부각된 각 정파의 정책이념에 관계 없이 우리나라 헌정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30여년의 중앙집권식 권력구조에 종지부를 찍고 지방 분권에 의한 참여 민주주의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광역의회는 기초의회와 달리 정당참여가 보장됨으로써 여당은 안정속의 국정수행을, 야당은 6공 3년 치적에 대한 중간평가와 함께 각종 정책 실태를 부각시키는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중앙정치 무대의 권력투쟁을 뒷받침하는 기능보다는 향후 어떻게 지방 살림을 꾸려 갈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 광역의회 출범의 더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해 문민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도의원 선거에서 본군에서는 계남, 장계, 천천, 계북면의 북 4개면과 장수, 변암, 산서의 남 3개면에서 각 1인의 도의원을 선출하게 되었는데, 북 4개면에서는 신민당의 오평후보가, 남 3개면에서는 신민당의 이정해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1991년 6월 20일에 실시된 광역의회인 도의원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수군 1 선거구 (남 3개면)】

정 당	입후보자	득표수	비고
민주자유당	양형식	3,121	
신민당	이경해	4,770	당선
무소속	안중수	1,267	

【장수군 2 선거구 (북 4개면)】

정 당	입후보자	득표수	비 고
민주자유당	김 두 봉	2,729	
신민당	오 평	4,024	당선
무소속	서 성 기	2,076	

2) 제2대 도의회의원 선거

제2대 광역의회의원인 도의원 선거는 1995년 6월 27일에 실시되었는데 22,677명의 총 유권자 중 80.1%인 18,163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제1선거구인 장수, 변암, 산서의 남 3개면에서는 2명의 후보자가 경합하여 민주당의 이정해후보가 당선되었으며, 제2선거구인 계남, 장계, 천천, 계북의 북 4개면에서는 4명의 후보가 경합하여 민주당의 김명수후보가 당선되었다.

자세한 득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수군 1 선거구 (남 3 개면)】

정 당	입후보자	득표수	비 고
민주자유당	한순태	3,253	
민주당	이경해	5,656	당선

【장수군 2 선거구 (북 4 개면)】

정 당	입후보자	득표수	비 고
민주자유당	한원희	2,566	
민주당	김명수	2,858	당선
무소속	김기수	798	
무소속	이택열	2,164	

3) 제3대 도의원 선거

1998년 6월 4일 실시된 도의회의원 선거 결과는 총 유권자 22,068명 중 78.9%인 17,416명이 참여, 제1선거구인 장수, 산서, 변암면에서는 2명의 후보가 경합하여 국민회의 이경해후보가 당선되었으며, 제2선거구인 장계, 천천, 계남, 계북의 북 4개면에서는 2명의 후보가 경합하여 국민회의 한병태후보가 당선되었다.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장수군 1 선거구(남 3 개면)】

정 당	입후보자	득표수	비 고
국민회의	이경해	5,593	당선
자민련	송재선	2,977	

【장수군 2 선거구(북 4 개면)】

정 당	입후보자	득표수	비 고
국민회의	한병태	4,046	당선
무소속	김명수	3,924	

4) 제4대 도의원 선거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도의회의원 선거는 총유권자 21,340명 중 78.5%인 16,767명이 참여하여, 제1선거구인 장수, 산서, 변암면인 남 3개 읍·면에서는 4명의 후보가 경합하여 민주당의 박

용근후보가 당선되었고, 제2선거구인 장계, 천천, 계남, 계북면의 4개면에서는 3명의 후보가 경합하여 민주당의 한병태후보가 당선되었다.

【장수군 1선거구(남3개면)】

정 당	입후보자	득표수	비 고
민주당	박용근	2,586	당선
무소속	송재선	1,841	
무소속	육광기	1,527	
무소속	홍봉길	2,469	

【장수군 2선거구(북4개면)】

정 당	입후보자	득표수	비 고
민주당	한병태	3,220	당선
무소속	김기수	1,626	
무소속	김명수	2,913	

5) 제5대 도의원 선거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도의회의원 선거는 총유권자 20,567명 중 80%인 16,464명이 참여하여, 제1선거구인 장수, 산서, 번암면의 남3개 읍·면에서는 5명의 후보가 경합하여 열린우리당 장영수후보자가 당선되었고, 제2선거구인 장계, 천천, 계남, 계북면의 4개면에서는 3명의 후보가 경합하여 민주당 김명수후보가 당선되었다.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장수군 1선거구 (남3개면)】

정 당	입후보자	득표수	비 고
열리우리당	장 영 수	2,966	당선
민주당	최 봉 철	1,605	
민주노동당	육 광 기	1,058	
무소속	강 도 식	534	
무소속	이 란 우	2,226	

【장수군 2선거구 (북4개면)】

정 당	입후보자	득표수	비 고
열리우리당	한 병 태	2,867	
민주당	김 명 수	3,137	당선
무소속	이 택 영	1,629	

6) 제6대 도의원 선거

2010년 6월 2일 실시한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장영수 후보가 40.4%인 5,906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장수군】

정 당	입후보자	득표수	비 고
한나라당	고 태 봉	926	
민주당	장 영 수	5,906	당선
무소속	박 용 근	4,537	
무소속	조 질 성	751	
무소속	김 명 수	2,631	

4. 기초단체장 선거

가. 제1기 기초단체장 선거

1) 초대 면장 선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보면 처음에는 지방자치 초기의 정치·사회적 특수성에 의하여 지사(知事)는 국가에서 임명하고, 시·읍·면장은 지방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였다.

그런데 근 4년동안의 운영결과는 당초에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지방주민의 정치적 훈련의 미숙과 제도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지방행정이 침체해짐에 따라 정부제안으로 제2차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시·읍·면장을 주민이 직접선거토록 하였다.

1956년 8월 8일 실시된 제1회 시·읍·면장 선거에 있어서 전북은 시장 정수(定數) 3명 중 2명, 읍장 정수 8명 중 2명, 면장 정수 166명 중 43명만을 선출하였다.

이렇게 전체를 선거하지 않은 이유는 시·읍·면장을 직선제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그 임기도 종전의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1958년 8월 15일까지 임기가 만료되지 않는 시·읍·면장에 대해서는 그 기득권을 법률 제388호로 인정하여 당시의 선거에서 제외키로 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당선된 장수군 내의 면장과 기득권을 지니고 있던 면장은 다음과 같다.

장수읍장	산서면장	변암면장	장계면장	천천면장	계남면장	계북면장
황중권(黃重捲)	이근우(李根雨)	장병후(張柄厚)	이종화(李宗和)	송영욱(宋永郁)	양기수(梁麒洙)	이인준(李仁準)

2) 제2대 면장선거

제2회 전북의 읍·면장 선거는 8읍 164면에 대하여 1960년 12월 26일에 실시하였다. 164개의 면장직에 대해 783명이 입후보하여 4.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장수군 내 당선된 면장은 다음과 같다.

장수읍장	산서면장	변암면장	장계면장	천천면장	계남면장	계북면장
유순도(柳淳道)	권흥옥(權興玉)	장재영(張在榮)	임철수(林喆洙)	박희숙(朴喜淑)	김재옥(金栽玉)	박영희(朴永熙)

나. 제2기 기초단체장 선거

1) 초대군수선거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는 1995년 6월 27일에 실시되었다. 기초자치단체장인 군수 선거는 민주자유당의 장재영후보와 민주당의 김상두 후보가 대립하였는데, 장재영후보자는 변암면 출신이고, 김상두후보자는 장계가 생활 근거지로서 선거전 양상은 남 3개면과 북4개면의 대립으로도 전개되는 것 같기도 했으나 당 대 당의 대결로 압축되었다.

총 유권자 22,677명 중 77.3%가 투표에 참가하여, 장재영후보에게 7,687표를, 김상두후보에게 9,843표를 던져 민주당의 김상두후보가 민선 제1대 장수군수로 당선되었다.

후보자별 읍·면별 득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당	입후보자	장수	산서	변암	장계	천천	계남	계북	부재자	계
민주자유당	장재영	2,576	984	1,410	594	700	506	593	324	7,687
민주당	김상두	1,626	1,202	753	2,709	1,142	1,135	812	464	9,843

2) 제2대 군수선거

1998년 6월 4일 제2회 동시선거로 실시된 군수선거에는 국민회의 김상두후보가 단일후보로 입후보하여, 총 유권자 22,068명 중 78.9%인 17,416명이 투표에 참가 13,850표를 얻어 장수군수로 당선되었다.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	입후보자	장수	산서	변암	장계	천천	계남	계북	계
국민회의	김상두	2,915	2,049	1,861	2,350	1,630	1,251	1,130	13,850

3) 제3대 군수선거



제41대 최용득 군수 취임식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제3회 동시 선거에서 군수선거에는 민주당 최용득, 무소속 유동훈, 무소속 장재영, 무소속 정희택 4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경쟁하였다.

총유권자 21,340명 중 16,760명이 참가하여 78.5%의 투표율을 보였고 6,621표를 얻은 민주당의 최용득후보가 당선되었다. 무소속의 유동훈후보는 827표, 무소속 장재영후보는 6,430표, 무소속 정희택후보는 2,502표로 각각 얻었다.

당시 선거현황은 다음과 같다.

정당	입후보자	읍 면 별 득 표							
		장수	산서	번암	장계	천천	계남	계북	계
민주당	최용득	1,511	864	466	1,440	1,168	744	142	6,621
무소속	유동훈	264	117	100	120	76	80	38	827
무소속	장재영	1,897	965	1,379	924	356	638	109	6,430
무소속	정희택	379	122	110	506	109	163	1,038	2,502

2002년 12월 19일 치러진 군수재선거에는 민주당 이경해후보, 무소속 장재영후보, 무소속 최용득 후보 등 3명이 출마하여 경쟁하였다.

총 유권자 20,891명 중 16,754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80.2%의 투표율을 보였고, 무소속 장재영 후보가 6,237표를 얻어 당선되었고, 민주당 이경해 후보 4,724표, 무소속 최용득후보 5,446표를 각각 얻었다.

4) 제4대 군수선거

2006년 5월 31일 제4 회 동시선거로 실시된 군수선거에는 열린우리당에서 최용득후보, 민주당 배한진후보, 무소속 장재영후보가 각각 출마하였다. 장수군수로 당선된 장재영후보가 8,034표(48.7%)를 득표하였으며 최용득후보가 7,249표(44%) 배한진후보가 777표(9.3%)를 얻었다.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	입후보자	읍 면 별 득 표								
		장수	산서	번암	장계	천천	계남	계북	부재자	계
열린우리당	최용득	1,852	826	366	1,594	1,121	708	469	313	7,249
민주당	배한진	189	105	67	124	78	96	81	37	777
무소속	장재영	2,105	936	1,451	1,236	455	728	670	453	8,034

5) 제5대 군수선거

장재영후보가 54.64%인 8,262표를 얻어 장수군수로 당선되었다.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	입후보자	읍 면 별 득 표								
		장수	산서	번암	장계	천천	계남	계북	부재자	계
민주당	장재영	2,458	914	1,394	1,003	636	748	528	581	8,262
무소속	김상두	1,529	769	323	1,860	827	720	569	262	6,859

5. 광역단체장 선거

가. 제1기 광역단체장 선거

1) 초대도지사 선거

서울특별시의 시장과 전국 9개도의 도지사 선거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1960년 12월 29일에 실시되었다.

전라북도지사를 선거하는데 있어서 1,101,846명의 선거인 중에서 42.7%가 투표에 참여하여 비교적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당시 도의원, 시·읍·면 의원, 시·읍·면장에 대한 선거가 며칠 간격으로 시행된바 있어서 선거자체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고, 아울러 당일의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전라북도에서는 7명의 후보가 입후보하여 185,384표를 얻은 민주당의 김상술후보가 180,012표를 얻은 신민당의 임춘성후보를 누르고 선거에 의

한 최초의 전라북도지사로 당선되었다.

2) 제2기 광역단체장 선거

가) 초대 도지사 선거

제2대 광역의회 의원선거와 같은 날짜인 1995년 6월 27일에 실시된 민선 제1대 도지사선거는 대통령선거와 같이 지역정서가 많이 작용했던 선거로 꼽히고 있다.

본도에서는 민주자유당의 강현욱후보와 민주당의 유종근후보가 출마하여 경합을 벌인 결과 총 유권자 1,360,350명 중 73.7%인 1,001,959명이 투표하여 48.0%를 얻은 유종근후보가 문민정부에서 제29대 도지사로 당선되었다.

자세한 득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 당	입후보자	본도득표	본군득표	비 고
민주자유당	강 현 욱	319,452	5,872	
민주당	유 종 근	653,295	11,604	당 선

나) 제2대 도지사 선거

1998년 6월 4일 실시된 전라북도지사 선거에는 국민회의 유종근후보가 단독 출마하였다. 총 유권자 1,400,419명 중 809,167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57.8%의 투표율을 보였고 유종근후보는 758,141표(득표율 93.6%)를 얻어 당선되었다.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 당	입후보자	본도득표	본군득표	비 고
국민회의	유 종 근	758,141	15,789	

다) 제3대 도지사 선거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제3대 전라북도지사 선거에는 총유권자 1,431,722명중 787,135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55.0%의 투표율을 보였고 전라북도지사로 당선된 민주당 강현욱후보가 571,650표를 얻었다.

한나라당 라경균후보는 63,661표, 무소속 손주향후보는 131,350표를 각각 얻었다.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정 당	입후보자	본도득표	본군득표	비 고
한나라당	라 경 균	63,661	1,508	
민주당	강 현 욱	571,650	10,873	당 선
무소속	손 주 향	131,350	3,840	

라) 제4대 도지사 선거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대 전라북도지사 선거에는 열린우리당 김완주후보, 한나라당 문용주후보, 민주당 정균환후보, 민주노동당 염경석후보가 출마하였다. 총 유권자 1,429,632명 중 827,387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57.8%의 투표율을 보였다.

전라북도지사로 당선된 김완주후보가 389,436표(득표율 48.1%)를 얻었으며, 문용주후보가 62,922표, 정균환후보가 295,891표, 염경석후보가 61,672표를 얻었다.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 당	입후보자	본도득표	본군득표	비 고
열린 우리당	김 완 주	389,436	8,836	당 선
한나라당	문 용 주	62,922	1,133	
민주당	정 균 환	295,891	4,460	
민주 노동당	염 경 석	61,672	1,478	

마) 제5대 도지사 선거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제5대 전라북도지사 선거에는 한나라당 정운천후보, 민주당 김완주후보, 민주노동당 하연호후보, 진보신당 염경석후보, 평화민주당 김대식후보가 출마하였다.

총유권자 1,442,805명 중 856,846명이 참가하여 59.4%의 투표율을 보였다. 전라북도지사로는 김완주후보가 66.5%인 569,980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 당	입후보자	본도득표	본군득표	비 고
한나라당	정 운 천	151,064	2,015	
민주당	김 완 주	569,980	10,571	당 선
민주노동당	하 연 호	52,331	866	
진보신당	염 경 석	35,565	728	
평화민주당	김 대 식	20,990	479	

나. 교육감 선거

1) 제1대 교육감 선거(2008. 07. 23. 실시)

입후보자	본도득표	본군득표	득표율	비 고
오근량	122,387	1,888	41.25%	
최규호	174,305	4,320	58.74%	당 선

2) 제2대 교육감 선거(2010. 06. 02. 실시)

【후보자별 득표상황】

입후보자	본도득표	본군득표	득표율	비 고
오근량	234,666	4,572	28.71	
고영호	99,641	1,563	12.19	
김승환	236,947	4,085	28.99	당 선
박규선	175,992	2,926	21.53	
신국중	70,008	1,204	8.56	

제 4 절 기타투표와 선거

1. 1962년 국민투표

4·19를 거치면서 생존해 온 민주당(民主黨)은 신·구 양파의 대립으로 인해 혁신세력(革新勢力)의 성장과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못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권력의 핵이 제거된 상태여서 각종 노동운동, 학원분규, 대외문제 처리에 대한 불만 등으로 전국(全國)이 일시에 치안부재(治安不在) 상태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사회는 자연히 불안해졌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1961년 5월 16일 군부에 의한 군사정변이 감행되어 제2공화국은 붕괴되고 말았다. 장면내각(張勉內閣)의 퇴진과 함께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하여 내각을 구성하였다.

최고회의는 제3공화국의 기반이 될 헌법을 마련하고자 기존의 헌법을 개정할 것을 의결하고, 개헌은 국민투표로써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리하여 최고회의에서 가결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찬·반투표가 1962년 12월 17일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당시의 국민투표는 한국정치사상 최초의 것이었다.

전국적으로 총 유권자 12,412,798명 중에 10,585,998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85.28%의 투표율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 78.78%인 8,339,333명이 찬성하였고, 2,008,801명이 반대하였으며 237,864표는 무효로 나타났다.

전라북도(全羅北道)의 경우 총 유권자 1,114,164명 중 965,618명이 참여하여 86.7%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중에 944,378표가 유효표였는데 찬성은 총 유효표의 75.8%인 731,855표, 반대는 24.2%인 212,523표로 나타났다.

국민투표에서 확정된 헌법에 의거하여 정당과 선거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였다. 인구 20만을 단위로 선출하는 지역대표 131명과 전국구비례대표(全國區比例代表) 44명인 이 선거제도는 혁명주도세력이 강력한 제1당의 지위를 획득하여 의회정치의 안정을 기하려는 의도에서 제정된 것이다.

2. 1969년 국민투표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103석, 전국구 27석을 확보했던 공화당(共和黨)은 1969년에 들어서면서 개헌작업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1969년 1월 6일 민주공화당의 김재호(吉在號)사무총장이 개헌이 검토 중에 있음을 시사하고, 익일(翌日) 윤치영(尹致暎)공화당 의장서리는 '후진사회를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국 근대화와 민족중흥의 과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이 필요하며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 연임(連任) 금지(禁止) 조항(條項)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헌법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앞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한데 이어 1월 10일에는 박대통령 스스로가 연두(年頭)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논의(改憲論議)는 내년에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함으로써 정국은 새해 벽도부터 3선 개헌안을 놓고 격랑(激浪)에 휩쓸리기 시작했다.

민주공화당 내(民主共和黨 內)의 개헌을 추진하는 간부들은 여론이 성숙되면 개헌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당내 구 주류계(舊 主流系)의 반대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에 나섰다.

이러한 여당 내의 움직임에 대해 유진오(俞鎭午)신민당 총재는 1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신민당은 당의 운명을 걸고 3선 개헌 저지투쟁을 다짐했고, 2월 3일 공화당 내의 개헌에 대한 찬반의견이 당내 의원총회에서 표면화되자 이러한 일련(一連)의 사태들에 대한 임시적인 수습을 위해 박정희총재는 더 이상 개헌에 관해 거론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그해 6월에 들어서면서 정부와 여당은 3선 개헌 문제를 다시 공식

화하여 민주공화당의 방침으로 굳히고 공화당내 의원들과 정우회(正友會)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개헌찬성 서명 작업을 시작했다.

정국이 그렇게 변해가자 6월 19일에는 3선 개헌의 반대를 위한 학생 데모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서울대 등은 학기말 시험을 연기하고 사실상 조기방학에 들어갔다.

한편 여당이 개헌논의를 공식화 하자 신민당은 정치정화법 해금인사(解禁人士)들과 회동하여 3선개헌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헌 저지 투쟁에 나섰으며 7월 17일에는 3선개헌 반대투쟁위원회가 발기되었다.

야당의 대정부공세(對政府攻勢)와 학생들의 시위로 정국이 긴장되고 사회의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던 무렵인 7월 25일 박대통령은 개헌문제에 관하여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개헌과 관련하여 정부의 신임을 국민에게 직접 물어볼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다음의 7개 항목을 여야 정치인들에게 제의하였다.

- ① 이미 논의되고 있는 개헌문제를 통해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임을 묻는다.
- ②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될 때에는 그것이 곧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임으로 간주한다.
- ③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때에는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통령과 정부는 즉각 물러난다.
- ④ 따라서 야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안을 발의(發議)해 줄 것을 바라며,
- ⑤ 야당은 합법적으로 개헌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지금까지의 대정부(對政府) 공격이 진정 민의에 근거를 두었다는 것을 국민투표 결과에서 입증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⑥ 개헌에 대한 찬반은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할 것이며 폭력과 불법은 배제(排除)되어야 한다.
- ⑦ 정부는 중립을 지켜 공정한 국민투표 관리를 할 것이다.

공화당은 7월 28일 당무회의를 개최하여 개헌안 발의 일정을 결정하고 개헌안의 작성에 착수함과 동시에 의원총회를 소집, 개헌안 발의 서명을 받게 하였다.

결국 8월 8일 개헌발의를 위해 공화당의 요구로 제71회 임시국회가 소집되었고, 개헌안은 공화당(共和黨)의원 108명, 정우회(政友會)의원 11명, 신민당(新民黨)의원 3명, 합계 122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발의되었고, 정부

는 그 다음날 국무회의의 결의를 거쳐 개헌안 발의를 공포하였다. 미국(美國) 방문을 떠났던 박대통령이 귀국하던 8월 25일 고대생(高大生)들은 개학 첫날부터 개헌반대 데모에 들어갔으며, 신민당의 정성태(鄭成太)의원 등 3명은 개헌반대 천리도보(千里徒步)를 위해 광주를 출발했다.

또 9월 7일 신민당은 임시 전당대회(全黨大會)를 열어 당(黨) 해산을 결의하고 동시에 신당발기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9월 정기국회가 개최되고 상정된 개헌안은 10일부터 심의에 들어가 13일에 표결될 예정이었으나 신민당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로 표결이 저지되자 공화·정후회 소속의원들은 14일 새벽 2시경 국회 제3별관에서 개헌안과 국민투표법안을 122표로 전격 가결시켰다.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즉시 정부로 이송되었고, 정부는 국민투표일을 10월 17일로 결정하고 10월 8일을 공고하였다.

한편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부터 지방유세를 벌여 온 여·야는 개헌안이 통과되자 본격적으로 찬반운동에 들어갔다.

공화당은 전국지구당 위원장을 지구별 책임자로 하는 국민투표대책위원회(國民投票對策委員會)를 구성하여 9월 17일 발족시켰고, 중앙당에서 훈련받은 8천여 명의 핵심 요원으로 하여금 지구별로 설득하였다.

드디어 10월 17일 전국 8,471개 투표구에서 일제히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총 유권자수 15,048,925명 중 77.1%에 해당 하는 11,604,308명이 투표하여 찬성 7,553,655표, 반대 3,636,369표, 무효 414,014표로써 찬성율 65.1%로 통과되었다.

전북의 경우 유권자수 1,165,078명 중 909,743명이 투표하여 77.4%의 투표율을 나타냈으며 그 중 찬성 568,077명, 반대 288,816명으로 찬성율 63%로 67세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후보가 얻었던 투표율인 39.7%를 완전히 앞지른 결과를 보였다.

3. 1972년 국민투표

1971년 7월 1일 제7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고 이어서 7월 26일 제8대 국회(의장 : 백두진(白斗鎭), 부의장 : 장경순(張炯淳), 정해영(鄭海永))가 개원되어 조국 근대화의 기치를 내건 제4공화국이 힘찬 전진을 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지난 선거기간 중간부터 3선개헌 반대 데모를 해 오던 대학가의

반발은 여전히 그치지 않았고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 그리고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지나친 행정권의 발동 등에 의한 제반 부작용 등으로 정국은 평온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1968년 11월 5일 닉슨의 미대통령 당선과 함께 불어 닥친 「닉슨 독트린」의 열풍은 주한미군의 철수, 미·중공의 접근, 일·중공의 접근, 중공의 UN가입 등 일련의 화해무드와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동은 한반도의 정국을 격랑(激浪)으로 몰고 갔다.

국회 개헌 직후 정가는 사법권(司法權) 우위(優位) 침해문제로 인한 이른바 「사법파동(司法波動)」으로 적지 않은 진통까지 겪었다.

8월 19일 서울 물리대 교수들의 대학자율화 요구가 각 대학으로 파급되어 나가고 있는 동안 남북(南北) 적십자(赤十字) 연락원들은 남북 분단 26년 만에 첫 대면을 하여 신임장을 교환하고, 9월 20일 첫 예비회담을 시작했으며 이어 10월 6일 열린 제3차 예비회담에서는 본회의를 서울과 평양(平壤)에서 교대로 개최기로 합의하는 등 급진전을 보이고 있었으나, 국회에서는 내무부장관(內務部長官) 해임문제로 공화당 내의 불화가 더해 갔으며, 수도경비사(首都警備司) 장병들의 고대(高大) 난입, 학생연행 등의 사태가 발생하여 정국을 불안정 속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급기야 정부는 10월 15일 서울특별시 일원에 위술령(衛戍令)을 발동, 10개 대학에 무장군인을 투입시키고 휴교령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사태가 계속 심각해지자 박대통령은 급기야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國家非常事態)」를 선언하게 되었으며, 국회는 12월 27일 「국가보위(國家保衛)에 관(關)한 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을 변칙통과(變則通過)시키기에 이르렀다.

한편 국회가 공전되고 신민당의원들이 국회의 정상화와 비상사태의 철회를 요구하는 가두데모를 벌이고 있는 중에서도 남북적십자(南北赤十字) 예비회담(豫備會談)은 계속되고 있었으며, 마침내 1972년 7월 4일에는 세계를 놀라게 했던 남북공동성명(南北共同聲明)이 발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대통령은 특별선언을 발표, 남북대화를 뒷받침하며 격동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민족진영(民族陣營)의 대동단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민족주체세력의 형성을 축성케 하고, 국력의 극대화를 위하여 헌법조항의 일부 기능을 중지시키는 한편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시키고, 대학휴교 등 각종 언론의 사전검열에 들어갔다.

이어 10월 27일에는 3·1 독립정신(獨立精神)과 4·19의거와 5·16 정변(政變)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명시한 본문 12장 126조 부칙 11 조로 된 헌법개정안을 공고했다.

이 개정안은 11월 21일에 국민투표에 붙여졌으며 91.5%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전북의 경우 유권자(有權者) 1,152,919명 중 1,086,562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94%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찬성율은 93.5%였다.

4. 1975년 국민투표

유신(維新) 3차년도인 75년에 들어서자 야당의 개헌운동은 전국에 파급되고, 개헌과 민주회복을 부르짖는 학생들의 시위가 점점 격렬해짐에 따라 1월 20일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에 대해 찬·부(贊·否)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취지의 담화를 발표하고 국민투표안을 공고했다.

신민당이 국민투표를 거부기로 한 가운데 2월 12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전국 투표율 79.9%, 찬성 73%로 나타났으며, 전북에서는 86.2%의 투표율과 72.4%의 찬성률을 보였다.

그러나 이와는 관계없이 민주회복 국민회의는 3·1운동 56주년을 맞아 민주국민헌장을 발표하는 등 민주회복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였다.

이에 여당이 헌법조문 비방처벌(誹謗處罰)에 관한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변칙적으로 통과시키는 등의 강경한 자세로 맞섰으나, 3월 말과 4월 초 연대, 고대, 한신대, 서울대 등에서 데모가 계속되어 임시 휴강에 들어가기 시작, 며칠 후에는 21개교가 휴강에 들어갔고, 이로 인해 연세대의 박대선(朴大善)총장, 고대의 김상협총장, 서강대의 데일리총장 등이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I.P.I는 전 세계 언론에 동아일보 지원을 호소했으나 문공부는 기자회견보를 폐간시키는 등의 강경조치를 취했으며, 5월 13일 박정희대통령은 헌법비방이나 반대를 금지하는 긴급조치 9호를 선포했다.

5. 1980년 국민투표

1979년 12월 21일 최규하(崔圭夏)대통령(大統領)은 취임사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개헌연구를 시작 하겠다.’고 말하고, 이어 1980년 1월 18일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안국민투표(改憲案國民投票)는 대통령발의(大統領發議)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80년 3월 14일 헌법개정심의위원회를 대통령직속(大統領直屬) 자문기관(諮問機關)으로 발족, 신현확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유진오(俞鎮午), 김정렬(金貞烈)등 68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정부는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전문과 본문 10장 131조 부칙 10조로 된 헌법개정안을 심의, 정부발의 헌법개정안으로 확정했다.

전두환(全斗煥)대통령은 9월 29일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개정안을 발의, 공고했는데 이는 48년 7월 17일 제헌(制憲) 이후 8차의 개헌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개헌안 공고에 즈음한 담화를 통해 ‘헌법이 국민의 사랑과 존경 속에서 그 권위를 오래도록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이념(理念)을 토착적(土着的)으로 수용할 것이 요청되며, 이것은 또한 정부가 개정안 작성에서 심혈을 기울인 기초이기도 하다.’고 전제하고 ‘대통령 선거 방법에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제도를 채택한 것은 공직(公職)을 지난날의 폐습으로부터 건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하고 ‘대통령을 직접 선거할 경우 인적(人的), 물적(物的) 양면에서의 과도한 국력낭비, 인기(人氣)에 영합(迎合)하려는 무책임한 공약의 남발, 여야 대립격화로 인한 국론분열(國論分裂), 지역감정 촉발에 따른 국민총화의 저해 등으로 정치를 지난날의 왜곡(歪曲)되고 파행된 모습으로 뒷걸음치게 할 많은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10월 22일 전국 12,173개 투표소에서 총 유권자 20,373,869명 가운데 19,457,664명(투표율 95.5%)이 투표하여 찬성 17,829,354표(찬성율 91.6%), 반대 1,357,673표(반대율 7%), 무효 266,899표(무효율 1.4%)로 확정되었다.

정부는 80년 10월 27일 오전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헌법공포식을 갖고 새 헌법을 공포했다. 새 헌법이 발효됨에 따라 각 정당과 국회는 자동 해산됐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폐지됐다.

6. 1987년 국민투표

대통령중심 직선제의 새 헌법안이 1987년 10월 27일 실시된 국민투표에

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가결이 확정됐다.

개표는 27일 저녁 7시 10분부터 전국 2백 45개 개표구에서 철야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중앙선관위가 28일 상오 최종 집계한 개헌안은 93.1%의 높은 찬성율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율은 5.5%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찬성률은 1962년 1차 국민투표 때의 78.8%, 1969년 2차의 65.1%, 1972년 3차 91.5%, 1975년 4차의 73.1%는 물론 이제까지 5차례의 국민투표 가운데 가장 높았다.

7. 제1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유신헌법 제3장의 목적과 법령에 의해서 구성된 국민회의 목적과 사명은 유신 헌법 제35조에 규정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제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적 주권적 수입기관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유신헌법의 확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가 1972년 12월 15일에 실시되었다.

선거는 전국 16,402 개의 투표구에서 실시되어 1,630 개 선거구에서 2,359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같은 달 25일 장충체육관에서 첫 집회를 갖고 무기명 투표로 임기 6년의 새 대통령으로 박정희(朴正熙)씨를 선출하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11월 25일 동 회의의 대의원 선거법과 동 시행령을 공포하였다.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법과 시행령, 동 사무처 직제를 공포하였으며 이 법시행과 동시에 종래의 대통령 선거법은 폐지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유신헌법 39조와 40조에 의해서 임기 6년의 대통령과 임기 3년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있다.

이상과 같은 목적과 취지에서 통일주체대의원을 선출하였는데 장수군에서는 아래와 같이 당선자를 냈다.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한순태	양형식	장득현	한원희	우병용	김병문	김두봉

8.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선거는 1978년 5월 18일에 실시되었고,

동 대의원들은 동년 7월 7일에 유신 2대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장수군 내의 당선자는 아래와 같다.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한순태	양형식	장원선	홍순태	최용득	양규석	김두봉

9.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

1980년 10월 22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대통령을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하게 되었다.

직선제에 따른 국론의 분열과 막대한 국력소모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방법인 선거인단에 의한 자유경선 방식으로 간접선거를 도입한 것이다.

「대통령 선거인 선거법」은 1981년 1월 9일 「대통령선거법」시행령 제 10162호로 발효, 동년 1월 24일(법률 제3355호)제정 공포하여, 1981년 2월 11일 대통령선거인단 선거가 실시되었다.

전국 선거구 1만1,616개 투표구에서 무투표 당선자 288명과 지역당선거 4,990명 등 전체 5,278명이 대통령 선거인으로 당선되었다.

전국 총선거인수 1,996만 7,287명 중 1,559만 9,252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78.2%의 투표율을 나타냈는데, 당시 장수군의 대통령선거인 당선자 상황은 다음과 같다.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한순태	임순승	장원선	홍순태	최용득	양규석	박영희
장일환	정상윤	김예곤	이만춘	김희관	이순우	김두봉